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전망  
- 유럽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

- 발 표 : 엄형식(벨기에 리에주대학 사회적경제센터 박사과정 연구원,  
모심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일 시 : 2009년 8월 26일(수) 오후 7시~9시
- 장 소 : 장충동 한살림 5층 교육장 '살림터'

정 리 : 신임수진

<엄형식>

반갑습니다. 엄형식입니다. 원고도 아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이 글은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더 나뉘으면 좋겠고요. 제 얘기의 수위가 현상이 이렇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유럽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 그것에 기반 한 운동이 어떻게 지금 되어있고, 배경을 아시면, 사회적 기업을 아시면 더 재밌을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요. 맨 뒤에 참고자료로 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제의 대응, 예전 글을 붙여주셨는데, 그것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한살림에서 강의를 한적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 경제란 말을 거의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 자체가 한국에서는 낯선 것이었는데, 최근 2년 사이에 사회적 경제의 뜻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더라도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다 유럽으로 간 이유는 한국에서 많이 개념을 수입하는 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팬찮다 싶으면 그것만 쪽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그것에 반영시켜서 하잖아요. 원래 어떻게 쓰였는지는 상관 안 하고. 이름이 섹시하면 가지고 와서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개념에 덧붙여서 얘기하고. 굳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똑같은 개념이지만 참 다양하게 이해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그곳에서는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으로 이 개념을 썼을까를 공부하고 싶어서 유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가 뭐냐 할 때, 개념을 한 마디로 말하기 어려운데, 제가 그 쪽에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을 쓸 때,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의 다른 개념을 섞여서 쓰더라고요. 제가 굳이 구분을 해본 게 자료 첫 번

째 파트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 사람들이 쓰는 데, 세 가지 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회적 경제 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동인 겁니다. 사회적 경제를 기치를 내걸었던 사회적 경제 운동인 거죠. 전통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19세기 여러 문헌에 나옵니다. 그 때는 목적의식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섞어서 썼던 것이 있는데, 19세기에 썼던 의미들이 그대로 살아 온 게 아닙니다. 잊혀 졌다가 1970년대에 프랑스 협동조합과 상호공제조합, 우리나라로 치면 보험인데, 그리고 민간단체 조직들이 각기 분야별로 나눠져 있고 그 속에 사회적 힘이 취약한 그런 상황에서, 197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협동조합이나 민간의 목소리를 키울거나, 그래서 이 세 흐름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한 뿌리였는데 지금은 나눠진 것 아니냐. 한 뿌리니까 다시 흩어진 식구들이 모여보자. 70년대부터 모인 겁니다. 모였으니까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길잡이요. 이걸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뭐라고 부르면 되겠느냐. 어떤 사회학자한테 우리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회학자가 문헌을 연구해 보니까 19세기에 이런 흐름을 사회적 경제라고 불렀던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너희 같은 식구들은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면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경제야.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상호경제조합, 민간단체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규정하면서 프랑스의 협동조합 연합회라든지, 상호공제조합 연합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모여서 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정부도 아닌, 기업방식도 아닌, 이런 민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다양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있다, 우리 사회에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지원을 해라. 그런 요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운드를 벌여나갑니다. 70년대에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상호공제조합은 찾기 어렵지만 민간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말고 다른 나라도 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협동조합이나 상호 공제조합들이 같이 뭘 할 필요나 동기가 없었던 겁니다.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보니까 이게 맞는 거죠. 아, 이게 뭔가, 옛 뿌리를 다시 모아서 몸을 불리고 정치적인 위상을 가지니까 정부에서도 여러 제도화가 되는구나 그런걸 보면서,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그런 걸 모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에서 저런 걸 해보니까 시민사회 힘이 커지더라. 우리도 협동조합, 민간단체들이 네트워킹 해보자. 그런 게 밑으로도 퍼져 나가서 프랑스를 시작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는 80년대에 유럽연합에 집행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에 자크 들로르라는, 사회당 출신인데. 이 사람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연합에서 일하면서 이 개념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 경제 이게 뭐야?’ 할 때, 이 사람은 오버를 한 거죠. 유럽연합에서 사회적 경제과를 만들어서 담당하게 하고, 관료들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키고 하니까, 유럽 연합에 속한 나라들도 유럽연합에서 하니까, 정부들도 정책을 검토하

기 시작하고 시민단체들도 개념을 보면서 확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프랑스를 넘어서서, 기존에 개별화되어 있던 민간단체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 틀로 다시 이해가 되고 협력하고 교류가 되고, 정부가 이것을 하나의 개념, 개념이 아니라, 덩어리로 보기 시작하는 일들이 90년대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이 유럽 곳곳으로 나가는 거죠. 나라마다 그걸 채택하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편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퍼졌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유럽연합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유럽을 흡수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잖습니까. 가난한 채로 받으면 서유럽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많은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북유럽을 경제적으로 키워서 들어오게 하려고. 그 중에 하나로써 유럽연합이 굉장히 보았던 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왜냐면, 동유럽에도 협동조합이나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데들이 동유럽에 걸립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유럽 연합의 많은 펀드들이 그 명목으로 동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 펀드를 받으려면 동유럽에서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게 동유럽까지 확장돼서,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사회적 경제는 공식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뭐냐? 그러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최근엔 재단까지 포함해서, 이 네 개의 제도적 유형을 가진 조직들을 통칭하여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 라는 것이 교과서처럼 퍼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걸 프랑스에서 처음 시도했던 사람들, 또는 이 분야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제도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새로운,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경제, 사회 활동의 가능성들을, 그런 가치를 지행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단지 제도화가 되고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운동으로 조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엔 없지만, 우리나라는 농협, 생협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는 많은 나라에서 협동조합연합회가 있고 그 안에 농협부문, 소비자 부문, 그렇게 돼있습니다. 협동조합 연합회 조직들이 국가별로 있거든요. 각국에 협동조합 연합회들이 모인 유럽협동조합연맹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럽 상호공제조합연맹이 있고, 유럽 민간단체연맹은 몇 개가 있습니다. 이들이 유럽수준의 연합조직들이 모여서, 사회적경제유럽 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전면에 쓰면서 유럽의 네 분야에 관련된 유럽 수준의 연합 조직들이 모여서. 지금은 유럽 수준의 정책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이라기보다도,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 거죠. 정리하자면,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사회적 경제냐 할 때, 이런 조직 활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직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선전하고 널리 알리고 확장시키고 정부에 지원이나 제도를 따내는, 일련의 활동들, 그 안에는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넘어서는 대안 사회로 가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용해서 정부 돈 좀 더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편차는 다양합니다. 운동이라는 명목이지만 편차는 다양하고, 어찌 되었든, 하나의 역동적

인 흐름으로 존재하고, 행위자가 있고 다이내믹이 있는, 하나의 정치적인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시민운동이 뭐냐고 하면, 구체적인 조직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와 교류 이런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런 걸 사회적 경제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많이 쓰이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자기들의 가치를 반영하는 개념이라고 만들어서 쓰고 다니는데. 그럼 정부에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그게 뭔데? 그게 몇 개데? 조직이 몇 개고, 고용을 몇 명하는데? 하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럼 중요해지는 게, 어떤 조직들의 양적인 고용, 활동들을 데이터들 만들어서 보여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쓰이는 사회적 경제 개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PO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죠. 이것도 미국에서 시작돼서 민간조직들을 정의내린 접근법이거든요. 그 정의에 기반 해서 우리나라 NPO는 몇 개다, 고용은 얼마나 하고, 매출이 얼마나, 이런 것들을 미국중심의 학계가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NPO 라는 개념이 확산 되어 있고,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개념으로도 이런 식의 똑 같은 작업을 유럽에서는 합니다. 같은 실체거든요. 시민사회에 기반 한 민간 조직들을 부르는 게, NPO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유럽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미국에서 시작된 NPO 개념의 핵심은,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겁니다. 민간단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사립대학을 보면 등록금 1000만원씩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립대는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이고 거기서 수익을 나눌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누구나 우리는 거기서 장사한다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사립 대형 병원들, 다 비영리 법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의 기준에 의하면 영리를 배분하지만 않으면 다이내믹, 민주, 이런 내용과는 무관하게 모든 조직들은 비영리 NPO로 분류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협동조합은 이익 배분을 조금 하잖아요. 그럼 이윤 배분을 한다고 협동조합은 거기서 빠집니다. 유럽에서 현장 활동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를 만든 주력은 협동조합입니다. 이 주력이 봤을 때 협동조합을 빼고 얘기하면 유럽의 사회적 경제는 해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NPO 개념으로는, 또 한편으로는 유럽의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윤을 조금 배분하지만 이윤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더 가치를 두는 것은 돈이나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 기반 한 결사체 성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방식은 돈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1인 1표 같은 논리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하지만, 반면 사립대학, 대형병원들은 비영리지만 이것들은 시민사회결사체로서의 성격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게 또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NPO 논의가 정리가 잘 됐는데, 유럽에서는 많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회적 경제가 뭐냐고 하면 방금 말한 의미에서는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에 있는 조직,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그 조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죠. 대표

적인 예가, 제가 프랑스에 릴 시에 갔는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연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청하고 소통이 잘 되어 있는데, 가서 물어 봤어요. 릴시의 사회적 경제 부문이 고용인구의 얼마를 대표합니까? 물었더니 릴시의 노동인구의 11%를 대표한다고요. 11%가 사회적 경제에서 일을 한 대요. 그럼 연합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200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200대 조직에는 고용인원이 몇 명 안돼요. 뭘 의미하냐면, 운동으로서는 200개 단체가 모여서 역동적으로 하지만, 통계를 잡을 때는, 사회적 경제가 뭔지도 모르는, 예를 들어 법적인 의미의 상호공제조합, 큰 신용조합, 거기 직원들은 사회적 경제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인거죠. 그래서, 운동성을 말할 때는 우리 조직을 말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중요하다고 얘기 할 때는 11%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걸 섞어서 얘기하니까 마치 유럽에서는, 고용인구가 11%면 유럽에서는 혁명이 나났어야죠, 11%인구가 들고 일어나면.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론적인 것인데. 사회적 경제가 뭐냐고 할 때, 조직들을 가리키는 것, 시민단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시장의 경제 논리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아닌 호혜와 협동에 기반 한 다른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논리가 시민사회에 있고, 사회적 경제는 이런 시민사회에 있는, 사람과 사람 간에 호혜의 논리와 더하기 국가와 시장의 자원논리를 오늘날 현대사회의 필요에 맞게 재조합하는. 쉽게 말해서 옛날 유럽에서 한동안 사민주의가 했던, 국가가 사회를 다 정리하는 그런 것이었고 신자유주의에서는 시장이 모든 걸 정리하는 입장이었는데. 사회적 경제를 말할 때, 시민사회의 힘에 기반 한 새로운 사회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가, 시장 말고 우리끼리 순수하게 할래. 그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시민사회에 있는 맨손으로 하는 것이 시민사회 힘이 아니라 시민사회 힘으로 국가와 시장의 자원과 동학을 시민사회의 헤게모니 안에서 재조합함으로써, 예컨대 사회 욕구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어린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엄마들은 일자리 나가고, 그런데 옛날에 국가가 국립 보육원을 깔았더니 부모의 소소한 욕구는 해소를 안 해주고. 기업들, 민간업자가 만들면 비용이 비싸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못가고. 이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하는 방식은 국가의 자원과, 시장의 역동성과,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부모들이 조금씩 참여하고 교육과정에 개입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는 다른 방식의 논리들. 요약하자면 시민사회에, 또는 다른 방식의 조합에 기반 한 경제활동, 사회 서비스 활동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 틀인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조직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건 이런 것이 움직이는 역동성이 얼마나 국가나 시장의 일반 논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주도성 하에서 활동들이 이뤄지느냐. 활동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이 분들의 주요 연구 과제가 뭐냐면, 사회 서비스.

사회서비스가 오늘날 증가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전에는 가족이 해왔고 처음 겪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결 할 좋은 도구가 없었는데 시민사회가 기능하면서, 새로운 상황, 사람과 사람의 가까운 관계에 기반 한 서비스들이 사회적 경제의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그분들은 보고, 많은 연구들이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그 커뮤니티 안에는 시장 조직이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동학이죠. 여러분이 자료나 공부 하시게 되면, 사회적 경제 얘기 하실 때 보면, 그래서 유럽의 11%나 차지하는 무시무시한 조직이 있다는 얘긴지. 헛갈립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 개념 안에서 섞어서 쓰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민할 때는 이 세 가지 수준을 구분해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주제는 첫 번째입니다. 운동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형성, 발전 하고 있느냐가 제가 공부하는 분야인데. 그런 맥락에서 최근 유럽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 지식으로 사회적 경제의 지리적 분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수준에서. 프랑스나 벨기에에는 사회적 경제하면, 지식인들, 사회 정책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민간 파트를 대할 수 있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습니다. 법적인 개념인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조직들이 자기 스스로 사회적 경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공공연히 활동합니다. 벨기에에는 주로 남쪽에서 영향을 받았고 많은 연구도 진행이 되면서, 제가 벨기에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시민사회라는 말은 거의 안 들어 봤어요. 거기서는 시민사회를 칭할 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프랑스에서는 이해에 따라 연대적 경제, 사회연대 경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털시에서는 사회적 경제부문을 털시 발전의 주요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시민들도 다 알아요? 물어보면 시민들은 모른대요. 여전히 과제고, 지식인들이나 그 수준의 언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일반 시민들이 시민사회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유럽연합이 초기에 사회적 경제라는 프랑스 개념을 전파하는 허브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공무원들이거든요. 임기가 돌고 그러는데, 90년대까지 유럽 의회의 다수파는 사회당이었습니다. 중후반 이후에 역전이 되어서 소위 우파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회적 경제 중에서 민간단체나 상호공제조합은 복지 쪽에다 갖다 붙이고,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쪽으로 붙여놓고 따로따로 대응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문제 할 때 협동조합 부르고, 복지, 고용 이야기 할 때 저쪽 부르고. 분리해서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대해서 무시하진 못하지만 이전처럼 전파하거나 활성화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피하는. 왜냐면 사회적 경제 부문이 지금은 개념이 아니라 조직이거든요. 정치적 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들어주는 척하면 애들이 돈 달라고 할까봐. 정치적으로 좌파라서 이런 게 아니고요, 들어주면 이것저것 달라고 하니깐, 그런 게 강하더라고요. 남유럽은 대표적으로 이태리랑 스페인입니다. 거기는 사회적 경제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태리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이 협동조합만 강합니다. 심지어 민간단체도 약합니다. 협동조합이 워낙 세고. 많은 것을 교회, 민간에선 협동조합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별로 없어요. 민간단체라는 지위가. 협동조합하면 다 통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실체는 인식하지만 이태리에선 없는 걸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협동조합으로 대치가 되고.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그래도 프랑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걸 스페인에서 모방해서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서 스페인의 사회적 경제 플랫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다수는 협동조합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으로써 활성화되어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개념은 쓰기는 쓰는데 중시하지 않는. 동유럽으로 가면 수입된 개념입니다. 동유럽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은 공산주의입니다. 협동조합들이 힘들어 합니다. 아직도 오해를 가지고 있고, 민간단체는 민주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민단체와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마인드가 비슷합니다. 상호 공제 조합은 별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 서유럽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소재로 협동조합 진영들이 다시 명예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전파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약간 뜨악해 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동유럽은 적극적으로 개념 수용이 돼서 우리처럼 열심히 공부합니다. 연구자나 현장 수준인거죠. 북유럽은 국가 위주의 사민주의 복지가 발달돼 있고 협동조합은 약간 기업에 가깝게 발전해 왔는데. 북유럽 중에 스웨덴의 경우는 재미있는데, 노르웨이는 유럽 연합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이랑 핀란드는 뒤늦게 가입했거든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유럽연합 가입하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으니까, 늦게 들어왔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쓰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걸 보니까 프로젝트에 많이 이용이 되니까,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연구해서 자기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어느 스웨덴 학자가 쓴 글을 보면, 그 이유가 유럽연합에서 이 이름으로 나오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도구적인 이해. 스웨덴에서도 학자라든지 정책 관련된 사람들은 아는 개념이고. 제일 재미있는 것은 독일어권인데,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사회정치 체제를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이 시장이 열려있지만 사회적으로 관리가 되는. 사민주의와 이런 것을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번역하면 사회적경제와 같습니다. 독일에서는 사회적 경제하면, 어, 그거, 우리가 만날 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 하는 거죠. 막상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협동조합 부문은 별로 비중이 있는 건 아니에요. 독일 같은 나라는, 듣기로는, 협동조합이 기업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참석했던 유럽연합 수준의 모임에 가니까, 최근엔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돼서 유럽연합 정부쪽까지, 각 나라들도 관심 있고 하니깐 컨퍼런스하면 많이 옵니다. 분위기가 이런 분포로 나타나면서, 독일에서 오신 분들

은 자기들이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너희들끼리만 이런 얘기를 해왔냐, 이런 얘기들. 이제 와서. 왜냐면, 독일 분들은 나라가 크니까, 큰 나라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 나라 안의 것으로 다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맛있는 떡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죠. 이런 단어가 있구나. 제가 지리적 분포에 대해 책도 봤지만, 그런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분포도가 이렇구나하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사회적 경제하면 유럽 사람들이 다 알 것 같고. 그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거고. 아는 사람, 심지어 학자들도 나라별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텍스트를 봐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필드에 행위자가 누구냐 보면, 크게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에 보면 현장 조직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협동조합 부문들이 나라별, 부문별, 유럽연합 수준의 부문별, 나라별, 다 포괄하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발달돼있고. 굉장히 역동적인 부분은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 오랫동안 상업적인 이미지로 굳어져 왔거든요, 서유럽에서는요. 영국에서 협동조합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국의 노협은 굉장히 신생조직입니다, 60년대 히피운동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협동조합이라고 말 쓰기가 불편한 게, 영국에서 협도조합, coop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슈퍼라고 생각한대요. 그냥 슈퍼. 노동조합 협동조합 하면, 노동자들이 왜 슈퍼를 하지? 그 정도 이미지라는 거죠. 협동조합운동이 역동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자기의 운동적 질서를 복귀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곳이 여기인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운동적 가치를 보고 하지만 사업적으로도 중요한 거거든요. 돈도 벌면서 하니깐, 공익적인 힘도 있고. 그런 스펙트럼입니다.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많이 하는 거고.

상호공제조합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19세기 후반에 국가가 자유방임주의를 했을 때, 모든 유럽나라에서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이 상조회를 만들어서 한 게 원형이거든요. 어떤 나라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가 복지 시스템으로 흡수됐습니다. 대부분 됐습니다. 양상이 달라서 독일에서는 그 금고는 민간이지만 국가가 통제 합니다 금고들을.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다 합니다. 상호공제조합은 국가에서 하지 않는 보험영역을 합니다. 국가가 다 가져가서 상호공제조합들은 보험의 공백지를 담당하는 방식이고. 벨기에는 국가가 의료보험을 관장하지만 개별 가입은 상호공제조합에서 합니다. 상호공제조합에서 돈을 내면 그 돈을 바로 국가로 보냅니다. 창구역할만 하는 거죠. 보험료 똑같습니다. 왜 창구만 두느냐, 상호네트워크 조직이 있으니까 국가가 별도로 안 만들고 그걸 그대로 두고, 관리만 국가가 가져 온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상호공제조합 부분을 딱 자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부분은 이미 국가 복지의 한 파트이거나 주된 행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돈도 많고 조합의 수도 당연히 많겠죠. 다 가입하니깐,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역동성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돈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는 큼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플랫폼 조직의 대빵이 상호공제조합 출신인데. 돈이나 힘이 있으니까 사무실도 내주고. 어쨌든 여기도 역동적인 부분이고요.

민간단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틀린 번역이 이 번역입니다. 어소시에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역하면 협회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결사체입니다. 협회는 어떤 단체들의 협회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개인들이 어소시에이트 된 거거든요. 민간단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60년대 이후 레디컬한 틀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미 오랫동안 교회, 정부로부터 자선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민간단체들도 오래된 게 있고. 지역 주민들이 동네별로 만든 문화 클럽, 이런 것들도 민간단체고. 이걸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쓰면 번영회, 향우회, 동문회 사무실 이런 거 다 어소시에이션입니다. 다 비영리고, 구성원들의 이해를 위해서 뜻을 모아 활동하는. 딱 어소시에이션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 활동의 내용이 회원들뿐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활동하게 많은. 우리나라 복지 기관들 다 이 개념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회적 경제 부분에서는 민간 조직은 딱 갈려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서비스라든지 경제활동에 관련된 민간단체들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주로 환경운동하거나 하는 단체들은 이 개념을 크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유럽수준의 민간단체 연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경제 유럽이라는 조직에 들어와 있고 하나는 안 들어와 있고. 안 들어 온 조직은 약간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장사하는데 도움 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의외로 공적인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돈을 안 버니까 국가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럼 민간단체들은 그쪽을 봤을 때 결국, 너희 국가 돈 받아서 하는 거면서. 이런, 배타적인건 아니고.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 다른 이해가 있고 양도 많고요. 카운트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쪽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노동통합 조직들이 유럽에 연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 세 개는 법적 제도적 지위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그런데 노동통합 기업은, 어떤 것은 협동조합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민간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일반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도적 지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는 것은 활동에 따른 구분이거든요. 그 연맹이 있는데, 협동조합 연맹과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요즘 각광받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기를 하나의 영역으로 보고, 특히 여기는 기존에 조직들을 고루한, 고착된 것으로 이해하고 그걸 넘어 취약계층과 함께 대안적인 경제를 개척하는 것으로, 새롭고 혁신적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사회적 경제가 이상

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게 지역수준이라는 생각을 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활동가들 상당수가 지역별로 블록을 형성해서 기존 정당과 연대해서 의원이나 시장을 하거나. 릴시의 경우도 녹색당 사회당 연정하는 곳인데, 그쪽 부시장이 사회적 경제 쪽에서 하시던 분이고 그분이 프랑스 지자체 중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인정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자체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제도적 유형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지역 사람들의 새로운 질서로 보고 그 주도적인 행위자로서 시민사회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물론 도구적인 데도 있고 진정성이 있는 곳도 있고 하지만, 명목상으로는 그런 활동들이 주목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조직들을 하면, 이런 것들이 행위자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쪽에는 유럽연합과 각 정부와 지방정부, 이런 것들이 있고. 유럽의회는 정당과 무관하게 사회적 경제를 지지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든 정당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최근에 유럽 의회에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이며, 유럽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대표 발의자가 자유당 의원입니다. 정당과 무관하게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의원그룹이 있고, 사회적경제유럽이라는 조직은 이 의원 그룹과 협조하면서 유럽 내에서 사회적 경제를 방어하고 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영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라는 걸 중요한 걸로 삼아서, 사회적 기업만 지원하니까, 기존에 유럽에 있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 소위 기존 민간단체들이 왜 사회적 기업만 하느냐, 우리도 같은 일 하는데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영국 정부가 제3섹터오피스를 만들어서, 옛날 사회적 기업은 작고 이런 일만 했는데, 제3섹터 오피스는 사회적 경제 부문 전체를 커버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관심은 사회적 기업이지만, 옆에서 하도 뭐하고 하니까, 시민사회를 중요한 행위자로 바라보는 접근입니다. 벨기에도 워낙 나라가 작으니까 논의가 금방 되고 정부도 금방 받아들입니다. 한편으로는 벨기에 정부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를 이해 할 때는, 사회적 경제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는 크다고 얘기하는데, 아, 요고. 이렇게 탄 소리 하는 거죠. 정부가 보기에 사회적 경제의 주요 역할은 취약계층 고용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벨기에에 사회적 경제 연합조직이 있고 굉장히 잘 하는데, 제가 들어 보면, 사회적 경제는 이만한 거다, 이름도 대안연대입니다. 번역하자면. 그 정도로 나름 역동적인데, 정부에서는 어, 그래, 취약계층 몇 명 더 고용해봐 이러는 거죠.

남부권, 불어권은 사회당이 장기 집권하는 지역이거든요. 사회당이면 잘 밀어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렇습니다. 노조가 강한 나라들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은 더 애매합니다. 왜냐면 국가가 복지를 해야 하는데, 저것들이 자꾸 해서 국가의 영역을 무너뜨린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거든요. 국가가 못하는 것만 너희가 해봐. 북유럽에서 사회적 조직들이 활성화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는

너희가 해봐 이런 정도 인거죠. 프랑스권과 남유럽은 다릅니다.

최근 논의의 흐름만 말씀드리면, 누구도 사회적 경제의 논의를 조망은 못 할 겁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리면, 사회적경제유럽이라는 조직이 원래는 낮은 수준 네트워크였다가 작년 2008년에 이름을 바꾸면서 높은 수준의, 그전에는 이름이 뭐였냐면,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의 상시연락기구 이런 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이름을 바꾸면서 사회적 경제를 전면적으로 칭하기 시작한 겁니다. 적어도 유럽연합수준에서의 민간 운동에서는 자기 정체성으로 굳어져 가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원래는 네 가지를 대표하는 조직만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에 노동통합기업연맹도 들어오고 지역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도 들어오고. 그래서 6개 조직이 가맹조직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기존 네 개는 제도적 지위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겁니다. 뒤에 두 개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용에 의한 거니까. 제도적 구분으로 했을 때 어떤 단체는 두 군데에 걸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도적 구분을 중시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질서를 흐트린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노동통합조직 등이 주목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제도적 구분과 동급으로 놓는 것에 대해서. 뒤에 두 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두 개가 잘 나가거든요, 주목받고. 그런 것에서 논의와 긴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태리에서 만들어진 건 다 아실 텐데. 원래는 노동자 협동조합 연맹 안에 한 파트였습니다. 이태리 협동조합 연맹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 계열 연맹에서는 아주 초기부터 사회적 협동조합을 따로 만들어서 해왔지만, 나머지 두 개, 좌파계열하고 다른 제3 계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작년인가에 좌파계열 협동조합에서 마지막으로 노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분리되면서 하나의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운동 내부에서. 유럽에서 제가 같이 일하는 조직이 노협연맹입니다. 그 중에 뭘 하냐면, 사회적 협동조합 스탠다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협 연맹 안에 소위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직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회원단체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어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당신들의 의견이 어떠냐, 그걸 종합해서 만들 계획인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역사로 볼 때, 새로운 게 생긴 거냐, 아니면 기존의 노협이나 소협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적인 성격이 생긴 거냐. 새로운 식구가 생긴 거냐, 기존 식구의 애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유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 판단은 유행은 아닐 겁니다. 유행을 넘어서, 농협, 신협이 필요했던 것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대가 요구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회적 협동조합도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 이태리에서의 이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같은 이름을 어떻게 쓰냐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조직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불러다가 파트너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문제, 복지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식으로 분리 대응을 하고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걸 실제로 보지 않으려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보입니다. 반대로 현장조직들은 우리가 더 큰 식구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유럽연합에 여기에 상응하는 파트너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제가 참석했던 컨퍼런스 중에 재밌었던 것이, 유럽연합에서 최근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있으니, 이거 써먹을만하겠다, 왜냐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고 혁신적이고 멋있으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은 조직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다루기가 편한 거죠.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고 지원해준다 이렇게 해도, 조직되어있지 않으니깐. 이쪽에서 세팅하는 대로 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누굴 지원할거냐에 대해서는 뭐, 글썄. 이런 분위기거든요. 자기들이 주고 싶은 데 주겠다는 거죠. 이런 걸 요점으로 하는 컨퍼런스를 했는데 메일링을 보낸 거예요. 참석자를 모으려고.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은 실체가 아닙니다. 개념이거든요. 대표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영국만 있고. 메일링 리스트가 사회적 경제 연합 조직한테 다 간 겁니다. 토론회를 했더니,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짝 앓아있고, 발제자는 유럽연합에서 펀드를 받아서 연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연구도 허접했거니와, 사회적 기업 개념을 막 했거든요. 그날, 저는 발제자가 울고 나가는 컨퍼런스를 처음 봤어요. 지도교수님이 토론자로 갔는데, 사회적 기업의 등장이라는 유명한 연구가 제 지도교수님이 주도해서 이루어지고, 이후에 그 개념이 유럽에 확산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사회적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면 잘하겠느냐는 프로젝트를 발주를 하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어떤 다른 중소기업 연구하던 연구자들이 컨소시엄을 짜서 더싼 값에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허접해서 그냥 닫고 있다가, 요즘 사회적 기업이 뜨니까 한번 써볼까 해서 띄운 겁니다. 연구 내용도 학문적으로 성과 없으니깐, 저희 지도교수님이 착하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 연구는 7가지 문제가 있다며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도 답변 못하고. 한마디로 쓰레기다, 이유를 대면서. 울면서 가시고, 이후 후속토론에서도 유럽연합 집행위에서는 개념 좀 띄워서 치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있는데 왜 우리에게 대해 인정안하고 딴 얘기만 하나, 하고 공격 받았던 것이 상징적인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의 신자유주의 적인 의도와 민간단체가 부딪히고 그 행사 이후에 참석자들이 조직적으로 담당자한테 메일을 다 보냈어요. 보고서가 유럽 연합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는데, 학문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검증됐으니 내려라, 그래서 내렸습니다. 정부 보고서가 채택됐다가 폐기되는 건 드물잖아요.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건데.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전통적인 부분이 있고, 역동적인 곳이 노동통합이라던지,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더 운동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회적 경제 논의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것은 운동적인 사람들이 전통적인 조직에 들어가면서 된 거거든요. 전통적인 조직들에 대해서 맛이 갔다고 하면서 좀 더 다양하고 레디컬한 지향을 가진 곳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통적인 곳들은 법적 지위를 가지고 한다면, 여기는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네트워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있지만 아프리카나 남미에도 이런 풀뿌리 경제 이런 운동하는 그룹이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아시아에도 필리핀하고 일본이 옹저버식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이런 흐름과 전통적인 쪽이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봤을 때는, 이런 흐름은 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우리 넷 중에 어디든 속해져 있는 곳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넘어서서 다른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노동통합 기업들이 역동성은 좋은데, 사회적 경제를 이론 틀로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정부 돈에 대해서 과감합니다. 전통적인 협동조합 진영은 정부 돈 쓰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저건 구걸이라 생각하고 정부 돈을 노리고 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쪽에서는 이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정부 돈도 쓰고 시장에도 팔고, 다이나믹하게. 왜냐, 목적이 이거니까.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볼 때는 공공활동을 하는데 시장논리로만 가면 당연히 그 논리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돈이 안 되면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공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정부 보조금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에요. 거기선 전통이 이런 관점이에요.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자본주의에 승리 하는 거고,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운동이고, 재네들은 정부에 돈 달라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를 시키는데, 제가 만나면서 놀란 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요한 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정부가 돈을 막 부으니까 그냥 막 흘러갑니다. 어쨌든 돈이 흘러가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이런 개념을 주도하고, 민간에서는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주는 유명한 단체에서는, 제가 물어봤어요, 사회적 기업은 어디까지라고 정의합니까? 그랬더니 사회적인 이노베이션을 주면 다 사회적 기업이다. 그것이 개인이건 심지어 공기업이건 상관없다. 굉장히 넓은 거죠. 쉽게 말하면 노점상을 한 분이 하셔도 사회적 기업인 겁니다. 협동조합 쪽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들은 계속 그런 걸 해왔고, 노력해왔는데,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 슈퍼, 하고 제긴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상한 걸 만들어서 쏟아 붓는 것에 대해서, 저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는 흐름의 주된 출처는 협동조합 쪽입니다. 그런 것이 전환되어 가는 건 분명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저렇게 나서서 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가

겠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협동조합은 200년을 버틴 조직이고 사회적 기업은 5년 밖에 안 된 조직입니다. 아무리 돈을 부어도, 돈이 끊기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만났는데. 이런 논의가 부딪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작년에 발표된 논문 중에 유럽과 미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그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좋은 일 하는 민간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밖에서 껌을 팔아서 돈을 벌어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민간단체의 수익사업의 내용은 사회적인 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 결국 그 돈이 사회적으로 쓰이는 거니까. 다른 경향은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미국 것이 워낙 넘쳐 들어오니까 사회적 기업 논의를 보시면 중복 된 것들을 보실 겁니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에서는 두 가지를 다 논의하지만 강조점은 다른데, 두 가지 논의를 다 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뭐냐, 어떤 것은 민간단체가 돈이 없으니까 좋은 일 하려고 돈을 버는 거다. 어떤 것은 사회적인 혁신과 선을 위해서 돈을 버는 활동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내용도 사회적이어야 한다. 취약계층을 고용한다던지 친환경적인 사업을 한다던지. 수익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유럽은 두 번째에 가깝고 거기에 플러스, 미국에서는 그것이 두 흐름에서 집합적 노력이건 개별적 노력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가 더 중시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 더 강조됩니다.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에는 하나가 더 붙는데, 집합적이라고 하죠. 영국에선 모르지만 유럽의 개념에서는 개인이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안보는 거죠. 이런 것들의 논의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정리하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를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스탠다드와 관련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역사적으로 새로운 부문이나, 기존부문의 시대에 맞는 적응이나, 그 부분들. 만약 새롭다면 뭐가 새로운 거냐. 저희 논의의 핵심은 지배구조가 새롭다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사회적서비스 제공하면서 좋은 일 하니까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노동자들의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시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것이 없거든요.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선이라는 것은 누구의 스펙트럼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선인지 아닌지는 공급자, 수요자, 편당을 하는 지자체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나 공유하는 것이어야만, 또는 이 활동에 대해 개입하고 있어야만 이것이 말 그대로 소시얼 한 거지. 저희가 이 논의를 하면서 쓰는 것이, 소이얼 코퍼레티브지만, 소시얼보다는 콜렉티브 인터레스트라고 많이 씁니다. 집합적 이해가

더 중요하다. 퍼블릭 프로퍼스 이것도, 공익하면 국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집합적 이해. 조합원 내부끼리 이해가 아니라, 지역사회 집합적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새로운.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 구조의 새로움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새로움이다. 사회적인 목적이 좋다, 말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보장을, 이 지배구조가 해준다는 거죠. 비영리냐, 이윤 배분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서도, 그것이 공익적이라고 하니까, 정부보조금이 대부분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이윤 배분하면 안 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답을 결정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가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사회적 기업 논의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어디까지냐 이 문제는 해명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프로젝트 하는 것의 취지는 은하수를 어디까지 은하수인지 줄을 긋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별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 별자리는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은하수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접근법.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하면 할수록 연구자들만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거든요. 새로운 접근을 자꾸자꾸 내놓고 이것 참고해서 또 새로운 것 만드는 책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실체에 기반해서 실체 조직을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제도적인 부분에 따른 접근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뒤에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유럽, 프랑스 협동조합연맹, 이런데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발표한 보도 자료나 이런 걸 요약한 것인데, 한마디로 경제에 위기에 대해서 유럽 조직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면, 경제 위기는 심각합니다. 경제 위기에 대한 대답은 사회적 경제에서 오지 않고 케인즈 주의에서 오고 있습니다. 또는 신자유주의의 케인즈 주의적 응용이지 사회적 경제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경제 위기 규모에 비해 사회적 경제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이견 아니다 하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하는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조직적 수준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역동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로 모인 이유는 다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것도 많거든요. 일반기업의 공격에 대한 방어, 공공부분으로부터 받는 차별에 대한 방어.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유럽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런 것이 있으면 대안사회에 대한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을 거야, 이렇지 않더라고요. 위기가 오니까 이런 조직들한테 계속 물어 봅니다, 다른 데서. 경제 위기가 오니까 너희 같은 곳에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대답이 뭐 있냐? 그러면 별로 말할 못하고요. 옛날에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유럽 연합 집행위 그 부서에서 같은 질문을 보낸 거예요.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경제 위기 속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잘 역할 할 것 같다고 쓰고 싶어서 연락을 돌린 겁니다. 근거 삼을 수 있는 사례를 달라. 사례를 못주겠는 거예요. 경제 위기, 자본주의 위기는 사회적

경제의 기회냐, 어떤 벨기에 교수님의 글을 인용하자면 자본주의의 위기는 언제나 위기였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위기를 위기로 만들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지만 진정한 위기로 가게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조직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없으면 위기다,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다 다시 발전하고 이런 거죠. 사회적 경제 진영이 한국 사회에서도 운동하지만 저는 이것이 개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정부쪽에 푸쉬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는, 운동으로서의 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하나 나아가서 유럽에서도 답을 못하고 있는,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 발짝 더 나간, 유럽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한 발짝 더 나간, 대안 전략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라도 좀 더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경제가 사회를 정말 바꿀 수 있는, 자본주의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서 자기 위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계신 분들이 잘 하시리라 기대하고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행>

역사적 시간을 거슬러, 공간적인 이야기까지 해 주셔서 그림이 그려지셨나 모르겠어요. 우리의 과제는 과제대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유럽 동향이나 이런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유롭게 고민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도 좋고 함께 토론해 보고 싶은 주제도 좋습니다.

말씀 가운데, 협동조합이 늘 부분적이고 비 주류고 위기 상황에서도 보완적인, 그러면서도 그것을 실체하게 하고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게 위기 이후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도로 스스로 여겨왔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자신 없음의 또다른 표현일 수도 있겠다, 거꾸로 적극적으로 위기를 주도하지 못하는, 여전히 수세적인 입장에서의 방어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에코생협\_안병덕>

앞으로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될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엄형식>

제가 유럽에 이제 한 2년 있는데요, 건물 공사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1년이면 짓지 않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운동도 우리나라는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촛불시위 막 했다가 조용해지고, 이러는데. 유럽은 그 변화가, 정주운동이라고 할까요. 어느새 돌아보면 이만큼 발전한 것 같다 하지만 뭐랄까, 10년 20년이면 어떻게 발전할 것 같다 한국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예측이 안 되고 워낙 구조화되고 이런 게 많아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하나 제 느낌은, 한편으로는 이 덩어리가 적어도 유럽연합이나 각국 정부가 실체가 인지는 돼있는 상황이 거든요. 그럼 두 가지 발전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성장을 계속해서 사회적

으로 의미 있는 개념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노력을 하고 있고. 예컨대 유럽연합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를 정식 범주로 받아들이고 제도화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게 덩어리가 커지고 여러 이해당사자가 들어 오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 주도권 싸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먹을 것 없을 때는 단란하다가도 먹을 것 생기면 싸우고 그런 것처럼, 그런 기미도 보인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운동으로 갈지, 이런 범주에서 여러 성향별로 분할 시기를 거칠 거냐, 이걸 운동으로서는 분화의 시기도 올 수 있겠다. 사회적 경제라는 큰 이름은 쓰지만 실제 운동은 몇 가지 운동으로 분화될 수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 <정규호>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각 영역들이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다시 모였다 하셨는데 모이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우리도 사회적 경제 연대로 모여 있는데 결합력이 약하잖아요. 말미에 정부나 시장에 대한 협상력이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모였을 텐데, 유럽에서 모이게 된 동기랄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못 모이는 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 <엄형식>

프랑스에서 모인 건데, 그 시기의 뒷얘기를 알 수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료들의 낱어는, 협동조합들은 경제위기에서 위기를 느낀 거죠. 그리고 상호공제조합도 국가 의료보험과 별도의 조직들이거든요. 경제 위기 여파를 누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경제 위기 이후에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그 시기에 운동성을 가졌던 건 68세대라는 운동했던 사람들이 사회로 흡수되면서 그런 사회적 에너지가 들어온 게 있다고 보거든요. 프랑스 사회당 내부에서 이런 환경을 지지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세력이 사회당 밖에 있다가 들어가서 결국 미테랑이 집권하기까지 정치적 프로젝트로 갔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검증된 건 아니고 제 가설은, 이 부분이 영향력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기획과 연동해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위기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는 것, 그 다음으로는 명분. 역사적으로 하나였던 것, 그런 건 사후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존재한다. 70년대 경제 위기는 국가와 시장에 동시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여서 같이 해보자 하는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왜 같이 할지 명분을 찾는 컨퍼런스가 몇 번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사회학자를 불러다가 확대를 시키면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저는 공부도 그렇고, 활동도 현재 그래서, 저는 제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 개념을 수입한 겁니다. 갖다 쓰려면 잘 갖다 써야 한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새롭고 독자적으로 만들어도, 이게 국제적으로 개념이 번져나갈수록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사회적 경제연대 회의 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계기로 이 분  
 에 관심을 가진 여러 민간조직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협동조합 중에  
 운동성 가진 데는, 생협하고 노협 밖에 없습니다. 노협은 그나마 세가 미미하고. 저  
 는 민간단체 부문은 사실 안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민간단체, 시민운동  
 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패러다임이 회비 받아서 그걸로 투쟁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풀뿌리 지역사회 공간에서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 내  
 야 하는 거고, 그런 시민운동들의 노력과 협동조합의 운동화를 위한 노력들이 중심  
 에 서고, 현재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들은 사실은 제 자리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뜨거운 이슈고 사람들이 예민해서 그걸로 모  
 이지만 사실 지금대로 가면 결국은 사회적 경제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 지  
 원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적인 조직 밖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가려면 협동조합운동을 정상화 시키려는 운동과  
 민간단체, 시민운동을 혁신하는 노력을 결합하면서 그 노력을 총체적으로, 이걸 사  
 회적 경제라고 안 불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부르던 간에, 시민단체 분들이  
 협동조합 운동을 다른 것으로 보잖아요. 이런 벽들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에 있는 시  
 민사회 에너지가 더 넓게 표명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혁신을 맞을 수 있는, 명칭은  
 뭐든, 중요한 축은 협동조합운동과 시민사회 혁신의 결합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활 분들이 안 계셔서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활이나 사회적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역동적이고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힘은 세지만, 사실 그 분들이 전면에서 서면 위험 합니다. 이런 이유 때  
 문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좁혀 버릴 수밖에 없고, 거꾸로 저는 생협이  
 나 이런 데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것을 아는데, 우려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생  
 협보다 작은 개념이거든요. 생협에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은 생협의 새로운 활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영역이고, 사회적 기  
 업에 대한 논의에 본질을 봐야한다. 이걸 통해서 부문화 되어 있고 과편화 되어 있  
 고 운동성을 상실한 것들이 다시 목표를 상기하고 재조직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  
 운 자원을 쓸 수 있는 정도로 봐서 전체 진영을 정비하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진영>

한국도 그렇고, 최근에 제4섹터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 같은, 유럽은 제3섹터로  
 이야기 하는데, 제 4섹터 같은 걸로 창조적인 혁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  
 게 생각하시는지요?

### <엄형식>

저희 업계의 업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런 게 많아져야 먹고 살죠. 되게 위험하  
 다고 봅니다. 말 만들기 가지고, 영국이나 미국의 사회적 기업 논의 책들이 문제거

말장난을 많이 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떤 운동들이 와 있고 그것에 기반 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부합하는 지 봐야 되는데, 말을 던진 다음에 현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책들, 무책임한 것 많습니다. 특히 영미 식에서는. 연구자들이 유럽은 어느 연구자들이든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장과 바로 반영되거든요. 미국은 그런 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던진 다음에 그것과 맞는 것을 모아서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위험하다고 봅니다. 제3의 물결로 책이 많이 팔리니까 요즘에 제 9의 물결, 그런 것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 <넥스터스>

유럽 쪽으로 공부하셔서 궁금한 내용인데.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다른 분들은 생협이나 시민단체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사회적 경제의 한계나 문제점은 정책을 만들거나 연관 된 사람들 자체는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 사람들만 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인의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해도, 제 주변 친구들에게 사회적 경제, 기업을 물어보면 10명 중에 2, 3명 정도만 알아요.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책의 여파인지, 유럽 사람들은 일반인이나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엄형식>

두세 명이라고 하니까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옛날 학생 운동할 때, 국가보안법으로 학교 갔다 왔는데, 저희 아버지는 안 좋아하시죠. 사회적 기업한다고 하면 사회주의로 생각하셔서.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또 잡혀 갈까 봐. 또 유럽에 가 있으니까, 옛날 어른 분들은 유럽에 있는 건 간접 만날 기회가 많다고 걱정하세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 초반에 말씀 드렸는데, 몇 나라들에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시민사회 아는 만큼 쓰는 개념입니다. 프랑스, 벨기에 이런 곳에서는 시민사회라는 말을 안 써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시민사회를 물어 보면 잘 모르는 만큼. 그 정도 아시는 거고. 다른 나라가면, 그나마도 거의 모르죠. 일종의 이 개념도 만들어서 팔아먹는 개념인 겁니다. 다만 유럽은 팔아먹을 때도 실체와 조율이 되면서 간다는 거죠. 학자가 먼저 던지고 범주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 지위를 통해서 이런 조직을 이걸로 부를 수 있다. 그 조직들도 스스로를 부르고, 자기네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나 대중이 알 수 있게 하려고 알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더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나라나. 차이는, 말씀 하실 때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머릿속으로 어떤 걸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지 궁금한데, 유럽의 사회적 경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림을 쉽게 그립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그림을 잘 못 그리죠.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도 알아야 하지만, 협동조합을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에서 나온 부산물이거든요. 이걸 알려면 더 넓은 시민사회와 협동조합을 알아야 이것이 왜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닐까.

#### <한살림고양파주 김재겸>

말씀 중에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이끌어 내는 게, 협동조합 진영의 운동성을 끌어내는 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실제로 협동조합이 어떤 부문에서 운동화 되었는지, 유럽 협동조합들은 상당히 거대하고 상당히 기업화도 돼있고, 슈퍼처럼 인식하는 이런 곳인데, 이런 것이 어떻게 운동화 됐는지 궁금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탈리아에서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협동조합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좌파 계열의 연합회는 늦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이지요?

#### <엄형식>

두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법은 1991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은 80년대 초반에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시작은 기독교 계열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이게 잘 되고 사회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서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자치연합회를 구성을 했어요. 기독교 천주교 계열에서는. 그 세력이 있었고, 기독교계열 연맹에서는 새로운 식구를 하나 만드는 그런 거죠. 그것이 확산돼서 다른 연맹에서도 확산이 됐고, 법제도가 된 다음에 확 확산되면서 증가한 겁니다. 재밌는 것은 90년대와 2000년대에 성장한 협동조합이 두 개인데 노협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다른 것은 죽거나 현상 유지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증가율이 엄청나고. 그런 것 때문에 협동조합 운동으로 봤을 때 바운더리를 넓힐 수 있는 주요한 출구로 봤던 거죠. 왜 늦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긴 노협이 더 셉니다. 어쨌든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건이 뭐냐면, 임금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원래는 없었는데 사회당 좌파계열에서 입법과정에 개입해서 만든 겁니다. 왜냐면 임금 노동자가 없으면 자원봉사자의 노동을 통해서 임금노동자의 일거리를 다 뺏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넣은 건데 그런 맥락에서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이 협동조합을 운동화 시켰느냐, 저는 다른 측면을 보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쓸 만큼 협동조합이 운동적 위기에 있었고, 돌파하려는 노력을 하는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80년에 레이들로 보고서에 나왔듯이 한마디로 운동성 복원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죠. 더 높은 가치의 협동조합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그런 것이었고. 그런 논의와 협동조합들이 기존의 슈퍼이미지로서는 망한다는 걸 알았을 때 많은 노력을 했고,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도 썼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등장했고, 레이들로 보고서 같은 게 나와서 그 결과로 1995년에 채택된 7번째 원칙입니다. 결국은 그때, 7번째 조항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끼리 잘 하면 됐지, 지역사회에 잘 해야 한다는 건 생소한 개념이었거든요. 그건 운동 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협동조합은 위기의 돌파로서 운동성을 복원하는 것으로 돌파해 왔고, 가장 상징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협도 유럽에서는, 소협은 거의 망했고. 유럽에는 바이오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유기농 점포들의 협동조합입니다. 소비자가 아니라, 영국도 노협이 상당수가, 히피운동 하시던 분들이 히피면서 채식주의를 하면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걸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게, 영국은 노협이 유기농 매장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생협이나 일본의 노협도 최근의 로컬 푸드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의 여러 유형은 시대의 요구에 의해 나온 거였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현대사회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생협이 하던, 비오쿱이 하던, 노협이 하던,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우리시대 먹거리나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거꾸로 과거의 욕구에 의해 만들어졌던 협동조합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협이 사라진 게 그런 거죠. 물건 조달이 어려운 시대는 아니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스페인은 에너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에너지를 같이 생산해서, 전기회사가 시골에 안 들어오니까 그런 곳들은 협동조합을 꾸려서 전기를 같이 구매해서 자체 분배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중앙하고 쇼부를 봐서, 조직돼 있으니까 더 싼 값에. 이런 식의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구도완>

사회적 협동조합의 개념은?

#### <엄형식>

법에 의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9개 나라가 있습니다. 법을 가진 나라가. 단일법인 나라가 이태리, 폴란드 같은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들은 협동조합 일반법이 있거든요. 그 안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명시돼 있는 곳도 있고. 이름이 약간 다르기도 한데, 프랑스는 공익협동조합으로 번역되는데. 실제 법적지위가 있고요. 그 외에도 협동조합적인 운영방식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곳들 중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이러저러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하고 협동조합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9개 이외에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서 규정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구요.

#### <구도완>

사회적이라는 게 공익에 기여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업형식>

그렇죠. 목적이 조합원 내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데 운영방식이 협동조합적인 것. 사회적인 의미를 몇 나라 법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거다 라고 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프랑스는 뭐가 사회적인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거꾸로 다른 종류의 이해 당사자가 세 가지 유형 이상이 결합된 총회가 지배구조를 가지면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 스펙트럼이 있지만. 이런 맥락의 협동조합들이 확산추세에 있는 건 분명합니다. 노동통합기업은 법적지위보다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말하는 건데,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옛날에는 장애인들의 작업장이 쪽 있었잖습니까. 그리고 실업자에 대한 훈련 기능을 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80년대 사회적 기업 운동의 주류는, 실업자는 증가하는데 작업장, 훈련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것에 대해서 혁신하려고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당시에 훈련 시켜서 내보내니까 다 취업이 안 되니까. 제대로 된 훈련을 시키려면 훈련의 내용이 실제 기업과 같아야 한다. 그래서 훈련기관들이 기업을 만들어서 훈련생들이 와서 기업에서 활동을 같이 하면서, 불어에서는, 경제활동을 통한 통합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노동을 통한, 그래서 사회통합을 이루는. 지금 현재 노동통합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들이 기업적 활동을 통해 훈련이 되거나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을 말하는 거고. 법적지위는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이탈리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A형 B형으로 나뉘거든요. A형은 사회서비스를 전달하기만 하면 구성원이 누군지 상관없이 A형으로 주고, B형은 생산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구성원의 몇 퍼센트가 취약계층이면 B형 협동조합을 줍니다. 이런 것들을 노동통합 기업이라고 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활이 전형적인 B형이죠. 그런데 유럽에서 취약계층은 정말 취약계층이거든요, 통합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국의 자활공동체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렵고 복지가 없으니까, 다 팬찮으신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취약계층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하는 것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그건 벗어 날 수 있잖아요. 벗어나면 정부에서 지원 딱, 이럴 수 있으니까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가 취약계층이니까 도와 달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하니까 도와 달라. 그래서 자활이 사회 서비스 쪽으로 발달한 이유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 <구도완>

유럽의 사회적 경제가 체제의 대안인 것 같습니까? 보완 같습니까?

### <업형식>

내부 사람에게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른데, 중요한 사람들 몇은,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기반 한 사회를 꿈꾼다고 얘기는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나는 꿈꾸고 청년 시절에 일을 했지만, 그래도 현실은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저는 잘 모르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대의 운동, 그 운동은 옛날 사회주의 운동과 연결 돼서, 정부쪽 프로젝트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사회 개조 프로젝트로 해서. 10만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 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체제의 문제고. 유럽 사람들은 정부가 돈 쥐서 안 되는 것 없다.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얘기하면 보기는 좋은데 정말 민중들이 만들어낸 힘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 바뀌고 봐야 한다, 이런 태도들. 우리나라에서 베네수엘라 모델 오, 이러는 것과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박승욱>

자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자활에서 사회적 경제 정부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대안을 이야기 하는 것이 반년 됐죠. 기본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구도완>

한살림과 모심과 살림연구소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 같습니까?

#### <엄형식>

저는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한살림 만들어지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책을 많이 봐 와서 특별한 기대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잘 알고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런데, 생협 분들이 말씀하실 때, 당연하게 그러시는 거겠지만 낮 선 것은, 생협으로 조직되어 있는 매개가 현실적으로 건강한 먹거리 같은, 그것들이 조합원을 묶어 내는 중요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활성화되면서 당연히 조합원이 늘고 안정화 될수록 중요할 텐데, 저는 그것이 원래 한 살림이 했던 이상적인 지향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키고 현대화 시키고 어떻게 다시 계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느냐, 모심과 살림 연구소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것도 해야 하지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한국 사회가 뒤집어졌어야 되는 데 안 그럴까. 그런 것에 대해 고민하고, 어떤 언어와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구매하는 것이 유기 농산물이 아니라 가치를 구입하게 될까. 단지 먹을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구입해야 되고 가치가 순환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가치를 생산하는 곳으로 모심과 살림 연구소가 중요한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 <구도완>

지역중심접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협동조합이나 주체들이 지역에 정치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까?

### <업형식>

대표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 형태는 대부분 지자체와 파트너가 되는 사회적 조직이 함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릴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고, 릴시 시청과 조직이 파트너가 되어야만 네트워크에 가입이 가능한 그런 조직도 있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법적지위, 업종과 활동과 무관하게 사회적 경제를 하나의 블록으로 이것이 힘을 가지고 지자체에 자기를 지지하는 의원을 많이 당선을 시켜서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 이쪽의 잠재력에 대해서 인정하고, 파트너로 보는 그런 접근과 시도들이 활발합니다.

### <구도완>

노사정이 아니라 지역수준에서?

### <업형식>

그렇죠. 노사정은 국가수준이라면 이것은 시민사회를 중요한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고, 유럽연합에서는 최근에 사회적경제유럽에서 하는 주요 이슈가 뭐냐면, 4자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노사정인데 여기에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사회적 경제가 들어야 가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전략 목표입니다. 지역 수준에서는 그런 것이 실현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 <질문>

사회적 기업보다는 협동조합 쪽에 가능성과 기대를 하고 계신데, 협동조합과 둘의 차이는 지배구조, 참여 주체 분류인데, 큰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상호 전환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바뀔 수도 있고, 협동조합이 확산되는 첫 번째, 그 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는, 사민당, 사회당 등 노동조합이 강한 쪽에서는 저해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생협 쪽으로 가야 하는지 복지적인 요구를 해야 하는지, 그걸 대립적인 거라고 보고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당이나 한국에서 시민조직, 노조, 생협 사회적 기업들이 경쟁적이지 않고, 울타리만 같은 그룹 안에서가 아닌 서로 경쟁하고 제일 먼저 발목을 잡는다면 과제가 될 것 같은데요.

### <업형식>

사회적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뭘 말하지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명확하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는데 협동조합인 거고,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말하면 아무도 말 안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뭘 활성화 시키냐 가지고도 정리가 안

되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런 접근입니다. 사회적 기업 좋고, 다양할 수 있는데 이것부터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다거나 확산 되어야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여러 민간단체 모델, 기업 모델 있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노동자협동조합은 너무 어렵다, 실패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럼 다른 걸 변형을 조금씩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0년 동안 살아있는 모델이면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실수를 했겠지, 모델이 틀렸다고 말을 쉽게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이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제 관점은 기본적으로 공공은 뭐가 공공이냐, 공공이라는 개념은 근대에 생긴 거거든요. 왕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으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누가 담지 하느냐, 국가였던 말입니다. 국가가 독점하던 공공에 대해서 국가가 잘 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스스로 조직해서 만든 거거든요. 어디까지 국가가 하고 어디까지 시민단체가 할 것이냐 이렇게 보기 보다는 일단 어디까지가 공공이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이 속에서 나라마다 어디까지는 국가가, 시민단체가 맡는 게 맞는지는 나라마다의 역사적, 제도적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리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회서비스를 하는 국가기구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필요하니까 국가비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시민사회가 들고 일어 난 거죠. 그런데 스웨덴은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다 해주거든요. 그럼 안 일어나죠.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니까 생겨야 된다, 그렇게 말 할 필요는 없죠.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런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냐. 의료생협의 문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나 공급, 이런 걸 봤을 때 고민해야지 생협이니까 해야 한다, 국가가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근행>

저는 사회적 기업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이나 사회적 현상, 회자되는 부분들이 사실 사회,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맥락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늘 놓치면서 얘기하다보니까 저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연결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런 고민을 현장에서 해왔고, 엄 선생님이 유럽에서 그런 안목을 좀 더 넓고 깊이 볼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어서, 계시는 동안에는 열심히 공부 하시고, 한살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셔서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셔서도 그쪽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인연이 맺어진 것 같고요. 유럽의 흐름이나 가닥을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애써주신 엄 선생님, 모든 분들을 감사합니다.